

강원경제 가장 큰 애로사항은 ‘고객·인력 확보’

현재 강원경제에서는 고객과 근무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등 자금 지원과 외지기업 유치에 필요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 고객·근무인력 확보 어려워

도내 경제전문가들은 ‘고객 및 근무인력 확보’(48.1%)이 지역 기업에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했다. 강원도에는 지역기업이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할 대형기업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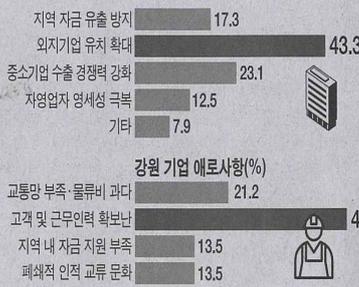
기업 대부분은 지자체, 지역 공공기관 등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들은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한정된 예산에서 효율적 집행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업체의 매출 확대에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면서 일자리 질과 양도 현상 유지에 머물고 있다.

이 같은 기업활동의 결핍들은 근무인력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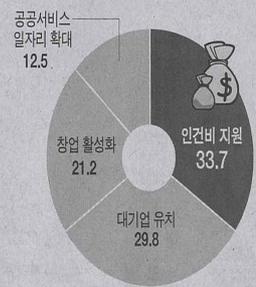
외원위기 20년간 강원경제 성장 여부(%)



강원경제의 극복 과제(%)



성장년층 일자리 확대 위한 적절한 정책(%)



영업·매출 대부분 공공기관에 의존... 20대 인구유출 심각
물류비 과다·자금지원 부족·폐쇄적 인적교류 등 뒤이어

고용창출 방안 ‘인건비 지원’... 최우선 과제 ‘기업 유치’ 꼽아
외원위기 이후 20년간 강원경제 성장폭 ‘보통’ 44.2% 답변

다. 구직자들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젊고 우수한 인력은 타지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도내 20대 유출 인구는 5,400명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았다. ‘교통망 부족·물류비 과다’(21.2%), ‘지역 내 자금 지원 부

족’(13.5%), ‘폐쇄적인 인적 교류 문화’(13.5%) 등이 뒤를 이었다. ■인건비 지원·기업 유치 필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에 인건비 지원’(33.7%)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도내에는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은 업체가

많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인건비 등 자금 지원을 통해 우수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 유치’도 응답자의 29.8%가 선택했다. 대형업체가 도내에 자리를 잡으면 일자리 증가와 함께 투자 확대, 안정적 거래처 확보 등의 기

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강원경제의 취약점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도 ‘기업 유치 확대’가 1위였다. 응답 비율 역시 43.3%에 달했다. 이어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23.1%), ‘지역자금 유출 방지’(17.3%), ‘자영업자 영세성

극복’(12.5%) 등의 순이었다. 기타 의견에는 △서비스산업 강화 △신산업 발굴 △지역특화산업 확대 등이 있었다.

■지난 20년간 강원경제 성장 ‘보통’
올해는 1997년 외원위기 이후 20년이 지난 해다. 경제전문가들은 지난 20년간 도내 경제가 크게 성장하지 못한 것으로 진단했다. 전체 응답자의 44.2%는 경제 성장 폭이 ‘보통’이라고 답했다. “그렇다”의 응답률은 총 25.0%에 그친 반면 ‘아니다’는 30.8%로 더 높았다.

설문에 참여한 경제전문가들은 “양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탄탄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질적인 성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기업 유치,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강원경제가 국내의 불확실성 및 리스크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4명 중 3명 “현재 경기상황은 장기형 불황”

차기 정부에 ‘내수침체 극복’ 주문
‘트럼프·사드’ 리스크 우려 목소리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국내 경기상황에 불확실성이 많다는 진단을 내렸다. 현재 경기상황을 묻는 질문에 ‘장기형 불황’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5%로 압도적이었다. ‘경기 저점’ 응답도 5.8%로 10명중 8명이 현재 상황은 경기침체라고 답했다. ‘경기 저점 통과 후 회복 국면’은 14.4%에 그쳐 국내 경제 상황이 향후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비율은 적었다.

차기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으로는 ‘내수침체 극복’(37.5%)을 꼽았다. 불황이 장기화되며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투자도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국제 불확실성의 파급효과 최소화

현재 국내 경기 상황(%)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회를 위한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31.7%로 뒤를 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수출 및 매출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또 사드 배제에 대한 중국의 반발, 북한의 위협 등 정치적 문제에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양극화 해소 등 경제민주화’(17.3%), ‘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11.5%)를 선택한 응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밖에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 내실화’, ‘일자리 창출’ 등도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정책으로 꼽혔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 설문조사 참여 전문가 /

◇교수·연구원·공무원·기관장(41명)
=강대현(강원지방조달청장) 강순삼(한국은행강원본부장) 강종원(강원발전연구원박사) 경기정(신원은행강원본부장) 김건영(농림축산검역본부장) 김남두(강릉원주대학교) 김석중(강원발전연구원박사) 김승태(한림대학교) 김영식(강릉원주대학교) 김인배(태백대학총장) 김희정(강원발전연구원박사) 김정일(강원중소기업청장) 김진기(강원발전연구원박사) 노승만(강원발전연구원박사) 박동수(국토교통부강원지역본부장) 박병직(관광청강원지사) 박용만(중소기업중앙회강원지역본부장) 박재명(도건설교통국장) 박창모(주력금융공사강원지사장) 서동업(도산업경제진흥원장) 손병일(강원대학교) 안광인(안전보건공단강원지사장) 안보기(새마을금고강원지역본부장) 오원형(도경제진흥국장) 우성식(폴리텍대강릉캠퍼스학장) 윤석은(동북지방통계청장) 이남규(강원신문보장재단이사장) 이승규(강원대학교) 이수(중소기업진흥공단강원지역본부장) 이춘인(한림대학교) 전주수(춘천비이오산업진흥원장) 전호성(한림대학교) 전홍진

(도글로벌투자총공사장) 정기문(강원대학교수) 정재현(강원대학교수) 최영순(신원조합중앙회강원지역본부장) 최종원(신원인력공단강원지사장) 한중호(강원중소기업청장) 홍신선(대주) 홍사교(우원회강원지역본부장) 황규진(강원발전연구원박사) 황은진(강원원주대학교수)

◇단체장·기업인(63명) =고광관(중앙아이티대표) 고영웅(중소기업기술협력강원지회) 관순우(휴먼부사) 김관주(춘천M백화점장) 김기현(삼우아이템대표) 김대호(도상공회의소협의회장) 김동호(정보통신공시협회회장) 김상규(누백건설대표) 김영숙(한국여성경제자총협회회장) 김옥희(일안대표) 김은철(지오에코대표) 김용수(메디아나대표) 김재기(속조상공회의소회장) 김지현(엔투에대표) 김철호(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문상수(삼아도시개발대표) 박광구(비몽CHC대표) 박성준(자유건설대표) 박승근(도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 박용성(태백건설산업대표) 박원일(미래기술대표) 박인규(태백상공회의소회장) 박재희(월드케이칼대표) 박찬정(비에스엔대표) 서상건(강원산인연합회) 서현길(삼흥대표)

서광용(전공시협회도회장) 신지용(한국과문회대표) 심기용(희명대표) 안영덕(지오메이저대표) 양홍천(백영우대표) 엄태성(새시대에너지) 오인철(건설협회도회장) 유재환(한일타이어대표) 윤희식(춘천에너지대표) 이근선(도소기업소상공인회) 이득식(엘빙엘에스대표) 이미옥(해상KNS대표) 이민형(대서식품대표) 이봉찬(전문건설협회도회장) 이선호(도유업협회) 이상형(도메리핀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원택(MS비트대표) 이해규(원주상공회의소회장) 이형민(성안건설대표) 이호성(신물식품대표) 전주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사장) 정경인(여성경제인협회강원지회) 정덕진(JH대표) 정동기(동진건설대표) 조병철(시골물유지관리협회도회장) 전세복(도관광협회) 최문진(중소기업중앙회강원지역회장) 최범기(강릉상공회의소) 최선남(태창건설대표) 최성두(도건축협회) 최중봉(중소기업연합회강원연합회) 하은수(삼척상공회의소) 하종갑(동해상공회의소) 한거희(누보테크) 한정희(한국경영학신중소기업협회강원연합회) 황관현(고려대표) 함은래(한국금강기술대표)

원주~강릉 복선전철 등 4개 철도 연내 뚫린다

올해 전국에서 모두 4개의 철도가 새로 개통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30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완공되는 철도는 원주~강릉 복선전철 외에 수색~서원주 기존 철도 고속화 사업,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동해선 1단계(포항~영덕) 구간 등이다.

연내 개통하는 4개 철도



원주~강릉 복선전철

서울~평창 72분만에 주파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수송지원 차원에서 건설되며 4개 사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사업비가 총 3조7614억원에 달한다. 최근 강릉 남대천교 상판 작업을 끝으로 120.7km 전 구간의 노반공사가 마무리됐다. 국내 최장 산악 터널인 대관령 터널(21.7km)을 2015년 11월 관통한 이래 34개 터널을 모두 관통했다.

원주~강릉에 들어서는 6개 역사(만종·횡성·둔내·평창·진부·강릉)는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완공된다. 올해 말 완공 후 개통되면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외국인 선수와 관광객들이 울림리 주경기장이 있는 평창 진부역까지 이동하는데 100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청량리~강릉 간 기존 열차가 5시간47분 걸리는 데 비해 새 철도에 투입되는 KTX-산천 열차는 서울에서 평창까지 1시간12분 만에 주파할 예정이어서 운행시간이 무려 4시간35분 단축된다.

철도공단은 오는 6월까지 역사·궤도·시스템 등 후속 공사를 모두 마치고 7월부터는 시설물 검증과 영업 시운전 등 종합 시험운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수색~서원주 기존철도 고속화 사업

청량리·망우역 '1단계' 사업 완료

수색~서원주 108.4km 구간 중 현장 여건상 새 철도 건설이 어려운 지역에서 기존 노선을 개량해 열차가 고속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1390억원이 투입되며 청량리역과 망우역을 개량하는 1단계 사업과 신경의선(수색~용산), 경원선(용산~청량리), 중앙선(청량리~서원주) 구간의 분기기와 신호 시스템을 개량하는 2단계 사업으로 나뉜다.

1단계 사업의 2개 역 노선변경 공사는 2015년 11월 시작돼 지난해 10월 마무리됐고, 2단계 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오는 6월까지 1년간 진행된다.

2단계 사업 3개 노선 전체 구간에 자동 열차 방호장치(ATP) 신호 시스템을 설치하고, 중앙선 윤길산역부터는 현행 일반 열차용 분기기를 '노스 가동 분기기'로 개량하는 방식으로 열차의 고속주행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평창 진부역 구간에는 무정차 열차와 서울역 경유 열차 각각 8회, 청량리역~평창 진부역 구간에는 35회의 무정차 열차가 투입되는 등 모두 51회의 열차가 평창동계올림픽과 함께 달릴 예정이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6.4km 전체구간 터널로 이뤄져

428억원의 사업비로 진행되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건설사업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여행객에게 기존 터미널과 동일한 철도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6.4km 전체 구간이 터널로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실드 TBM' 등 첨단공법을 활용해 터널 굴착을 모두 마친 상태로, 후속 공적인 궤도(2월 완료 예정)와 전력, 신호, 통신 공사를 차질없이 펼쳐 연내 개통할 계획이다.

동해선 1단계 포항~영덕 구간 철도

포항~영덕 25분으로 단축

경북 포항에서 강원도 삼척까지 166.3km의 단선철도인 동해선 철도 건설사업의 1단계로 포항~영덕 44.1km 구간이 연내 우선 개통된다.

1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포항에서 영덕까지 25분이 걸려 자동차로 60분이 걸리는 것에 비해 35분이 단축된다.

환경해린 철도망으로 구축되며 동해안 관광객 통행수요 분담과 지역개발 촉진이 기대된다. 한상준기자 newspia@

올 9535억 규모 환경시설공사 선보여

환경공단, 125건 발주계획 확정

한국환경공단이 올해 총 125건, 9535억원 규모의 환경시설공사를 새로 내놓는다. 이 중 이천시 부발 공공하수도·창원시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 3건은 탄키(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제주시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부산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금산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 3건은 기술제안 방식으로 낙찰자 선정에 나선다.

환경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환경시설공사 발주계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입찰 건수는 전년(93건)보다 34.4%, 공사금액은 전년(7935억원) 대비 20.2% 증가한 것이다.

시설별로 보면 하·폐수처리시설이 44건으로 가장 많고 △폐기물처리시설 24건 △상수관망 15건 △에너지자립화 시설 등 기타 환경시설이 42건이다.

올해 환경시설공사 중 최대어는 이천시 부발 공공하수도 탄키공사로 공사비는 388억4200만원 규모다.

이 사업과 함께 창원시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285억원),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270억원) 등도 탄키 방식으로 집행한다.

공사비 352억원 규모의 제주시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부산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220억원), 금산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141억9700만원) 등은 기술제안 방식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이들 6건의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119건은 일반경쟁 방식으로 입찰을 집행하는데, 100억원 이상 공사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영광군 382억7500만원) △세종시 부강면 공공하수·하수관로사업(360억원) △세종시 장군면 공공하수 설치(360억원) △가평군 환경기초시설(341억4500만원) 등 28건이다.

한편 환경공단은 지난해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추정가액 50억원 이상 공사, 10억원 이상 용역·물품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체결 방법 등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기술용역 수행실적평가(PQ) 참여 기술자 경력 및 참여업체 수행실적 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췄고 입찰담합, 사업비 증가, 대형건설사 수주 편중 등 탄키공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전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해 점검하고 있다.

박경남기자 knp@